



# 진정한 농업경쟁력 어디서부터 오나

■ 황민영/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우리는 한국농업의 “경쟁력”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것도 본격적인 무한경쟁시대에 한국농업이 세계농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경쟁력, 소위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해왔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방농정은 농업인들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주고 말았다. 기술농업, 시설농업, 기계화농업, 규모화농업, 수출농업, 유기농업, 환경농업, 부가가치농업 등등 참으로 많은 유형의 농정을 추진하여 왔지만 무차별적 개방농정의 대세 앞에 우리 농업은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이처럼 새로운 농정은 정권이 교체되고, 장관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농업의 위기적 상황이 조성될 때마다 형식과 내용을 달리 하며 수 없이 발표되고 추진되었다. 이들 농업대책이 발표될 때는 항상 한국 농업과 농

촌의 밝은 미래를 전망하곤 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농업인의 기본적 상황은 진보하지 못하고 악화되기만 했다.

## 기로운 농업·농촌문제, 21세기 농정 요구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농정을 반성하고 새로운 농정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술한 위원회도 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토론도 해 봤지만 농업인의 처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신농정이 추진되고, 예산이 투입되면 될수록 농가부채는 늘어나기만 하고 농업인들은 농가부채 때문에 더 이상 못살겠다며 한달이 멀다하고 거리투쟁에 나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농업과 농업인의 어려운 사정은 심화되고 “신농정 부채”의 누적으로 농가경영의 도산이 잇따르면서, 농업인들은 부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방농정 추진과정에서 57조 농업 투자 등 예산만 먹어대는 농정은 끝내야 한다고 비판하는 쪽이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은 이에 대해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농업인들은 새농정, 개방농정의 지침에 따라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개방농정의 잘못으로 더욱 어려워져가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어찌 그럴까.

이제 본격적 개방농정이 추진 된지도 10년이 되었다. 1992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커다란 충격에 휩싸인 한국농업의 새로운 모색을 준비하기 위하여 1994년 문민정부, 대통령직속의 농어촌발전위원회 합의에 따른 농정에서부터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농정의 형식과 내용을 달리하면서 농어촌 살리기,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고자 갖가지 농정을 추진해 왔다.

1980년대 후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본격화 될 당시만 해도 농업인들은 “한 톨의 쌀알도 수입할 수 없다.” “한 점의 쇠기도 수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투쟁에 나섰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떤가. 이제 마지막 농업개방협상이라고 할 쌀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것도 관세유예나,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이나 일뿐 본질적 내용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한국농업, 농가에서 차지하는 쌀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쌀 재협상에서 농업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도 않겠지만, 모두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만큼 개방농정 하에서 농업, 농촌의 문제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바로 오늘의 농업과 농촌의 상황은 농정의 틀에 대한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

해 새로운 처방, 21세기 농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경쟁력 제고’ 위해 과학적 분석·대응책 수립**

우리는 지난 정부에서 농업경쟁력 향상의 일환으로 규모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다. 또한 한국농업의 소농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협동적 경영을 통한 생산, 유통, 가공, 판매, 구매 등 여러 부문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협동조합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지 못하면서 제자리걸음이다. 영농조합 등 농업경영

농촌의 기본적 가치와 역할에 대하여 말만 앞설 뿐 이에 상응하는 정책이 뒤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곁돌고 있다.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농촌이 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 즉 국가가 적당한 댓가를 지불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소득보장이고 사회적 비용인 것이다. 현재와 같은 농가 소득수준, 소득구조로는 우리가 바라는 농업 농촌을 유지, 발전시킬 수 없다. 농업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생산비가 보장되지 않는 농업경영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겠는가. 할 수 없다. 최소한의 삶마저 보장되지 않는

**농업·농업인의 경쟁력 제고 위해 분야 막라한 ‘개혁’ 이뤄내야  
과거·미래의 10년 농업 운명 가를 것, 개혁농정에 다 같이 나서야**

제도 정책의 준비가 부족하고, 협동조합의 반발, 그리고 농업인들의 경영 미숙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하여 성공적인 정책이 되지 못했다. 특히 이러한 정책들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체, 농업인 모두의 기본적 과제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중앙집권적, 획일적으로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오히려 농가만 부채를 더욱 떠안게 된 것이다. 그것은 신자유주의 세계무역기구(WTO)의 본질, 세계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정부의 졸속적인 무책임한 관료농정이 자초한 결과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농정은 여전히 개방농정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인식, 그리고 전략과 전술에서 오류가 노정되고 있다. 농업,

농업이 존재할 수 있으며 농업이 없는 농촌이 농촌인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지상주의 농정에서 빨리 탈피해야 할 것을 주문했던 것이다. 더욱이 농업의 경쟁력, 가격과 품질경쟁력도 경쟁력이 있는 사람, 농정시스템이 경쟁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 과연 우리 농업인의 경쟁력 수준은 선진농업국 어느 나라 수준인가. 농업인만이 아니다. 농업과 농업인의 경쟁력은 농업과 관련한 제반 조건의 총화라고 말할 수 있다. 농업인의 국제경쟁력이 있으려면 농림부도, 농촌진흥청도 이에 상응한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농과대학도, 농업인단체도 마찬가지이다. 학자들의 경쟁력은 어떤가. 정치인의 경쟁력도 중요한 요소

이다. 농기구, 비료, 농약회사도 국제경쟁력에서 우위성이 있어야 하고 농업과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각종 기관 단체 등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가 경쟁해야 할 선진농업국과 제반 경쟁력과 관련한 요인을 과학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 운명 기틀 전·후 10년, 질체질명 기회로 삼아야

그런 점에서 오늘의 농업, 농촌을 예워싸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다시금 119조 농정을 시작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경쟁력의 요체는 사람이고 시스템인데, 119조 농정에 맞는 인력구축과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한두 푼 하는 사업이 아닌 수십억이 투자되는 대형 프로젝트가 대응을 이루고 있다. 물론 농정당국이 이번만은 지난날과 같은 실정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다양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실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언제나 마찬가지였다.

그 동안 농림부는 개방농정을 추진하면서 농업분야로서는 커다란 인재 손실을 입었다. 우수한 농정관료들이 옷을 벗는 불행한 사태가 이어졌다. 그렇지 않아도 인재가 부족한 판에 불가피한 농정실패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소모전은 이제 끝을 내야 한다. 우수한 농업인이 농업과 농촌을 위하여 소중한 만큼 우수한 관료는 더욱 중요할 수 있다. 우수한 인재는 하루아침에 양성되어지

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의 농업은 21세기의 격랑을 뛰어넘어야 한다. 전환적 농정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농정추진 전략으로 선택과 집중을 선택했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그러나 여전히 농정은 선택과 집중이 아닌 포괄적 농정의 굴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업, 농촌기본법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파기되고 농지는 규모화와 역행하면서 세분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안정적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직불제는 초보적 수준에서 진척이 없으며 협동조합개혁은 소리만 요란할 뿐 본질적 개혁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농정기구개혁은 이대로 좋은가. 농업인단체의 개혁 또한 시급하다. 우리의 농업인 단체들은 이대로 좋은가. 이러한 모든 것이 농업경쟁력, 농업인의 경쟁력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다.

119조 농정마저 실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아픔, 농정개혁이 모든 부분에서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것은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가는 아닌 다 같이 살기 위한 몸부림이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세계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나라와 나라간, 지역과 지역간 경쟁력을 갖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지구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지난 10년의 농정을 교훈삼아 앞으로 10년이 한국 농업의 운명을 가름할 절체절명의 기회로 인식하고 성공적 개혁농정에 다 같이 나서야 할 것이다. **농약정보**